

담당부서 : 사법지원실

담당자 : 강종선 심의관

공보관실 : ☎ 3480-1324

## 국민참여재판 최종형태(안) 의결

- 대법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3. 1. 18.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의결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그 동안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큰 문제점 없이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고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함. 따라서 제도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들에 관하여 최종형태(안)에서 다소 수정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배심원 평결의 효력에 관하여는, 현재의 권고적 효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사실상의 기속력(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부여하기로 함. 당초 미국식 배심제와 같이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헌법 적합성의 문제 및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하여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큰 무리 없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함
- 실시요건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함
- 또한, 단순다수결 평결제도를 폐지하고 배심원 3/4 이상의 찬성에 의하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하였고, 국민참여재판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은 민사소송의 당사

자처럼 법대를 보면서 나란히 앉는 것으로 좌석배치를 변경함

- 그 밖에 세부적인 재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제도설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다음 달 18. 개최되는 공청회를 통하여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형태(안)을 확정된 후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임

## ①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활동 경과

- 사법개혁위원회는 1단계 국민참여재판제도를 5년 동안 시행한 후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를 결정하도록 건의함
-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시행 5년차이던 2012년 7월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위원장 신동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구성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2012년 7월부터 총 7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시행성과 등에 관한 분석과 논의를 하였고, 지난 18일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형태(안)을 의결함

## ② 최종형태(안)의 주요 내용

### (1) 기본 전제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지난 5년 동안의 시행성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토대로 1단계 국민참여재판제도가 그 동안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전반적으로 잘 운영되어 왔으며 형사재판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같이 함
-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당시부터 주요 쟁점이던 ‘배심원 평결의 효력’과 ‘실시요건’ 등 일부 쟁점들의 경우에는 최종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소 수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 밖에 세부적인 재판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도설계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

### (2) 배심원 평결의 효력

-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하 ‘참여법률’)은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 최종형태(안)은 위와 같은 ‘권고적 효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배심원의 평결에 대하여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배심원 평결 존중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기로 함. 즉,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존중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심원의 평의·평결의 절차 또는 내용이 헌법·법률 등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결결과와 달리 판결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양형에 관한 배심원의 의견은 종전과 같이 권고적 효력만 유지함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미국식 배심재판에서와 같은 법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① 현행 헌법상의 적합성 논란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실증적인 분석 결과 아직 우리 사회에서 미국식 배심제 도입에 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큰 무리 없이 일반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사실상의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채택함

### (3) 실시요건

- 현행 참여법률은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참여재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신청주의)
- 그 동안 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거나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의견을 재판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주요 사건들에 있어서는 정작 피고인의 불신청으로 인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됨
- 최종형태(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강제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함

### (4) 가중다수결제 채택

- 현행 참여법률은 만장일치 평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 단순다수결 평결도 허용하고 있음

- 최종형태(안)은 배심원 평결에 대하여 단순한 권고적 효력을 넘는 ‘사실상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과 연계하여 단순다수결 평결을 폐지하고 배심원의 3/4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평결이 성립된 것으로 보는 ‘가중다수결제’를 채택함. 다만,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hung jury)에는 다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고 배심원의 평결 없이 판결하되 배심원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최종형태(안)에서도 평결의 원칙적인 모습은 만장일치이므로,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가중다수결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심리에 참여한 판사의 설명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함

## **(5) 법정구조**

- 현행 참여법률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서로 대등하게 마주 보고 위치하도록 하고 있음
- 이러한 현행 법정구조에 관하여는, 검사석에서는 배심원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 및 변호인 석에서는 증인의 표정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 이에 최종형태(안)은 검사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민사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처럼 대등하게 법대를 바라보면서 나란히 앉는 것으로 좌석배치를 변경함

## **(6) 기타**

- 그 밖에 배심원의 양형토의 및 의견제시,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권한, 배심원 및 공판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 항소사유 등은 지난 5년 동안의 시행성과 분석 등에 비추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행 제도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함

## **③ 향후 일정**

- 국민사법참여위원회는 다음 달 18일 서울종합법원청사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제7차 회의에서 의결된 최종형태(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형태(안)을 확정짓고 대법원장에게 보고할 예정임